다산포럼

한국 민주주의, 그 이중의 수난

고 세 훈
고려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우리는 종종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민주화를 희생해서 산업화를 일군' 시대로 회상한다. 실은 산업화의 명암이 한국처럼 극명한 나라도 찾기 힘들다. 그 역사가 우리 사회에 드리운 가장 넓고 짙은 그늘은 아마 불평등의 구조화일 것이다. 재벌이 권위주의 정치와 이익을 주고받으며 금권을 키우는 사이에 생산자 계층의 권력자원은 항구적으로 위축되었다. 오늘날 사회적 대타협을 외치는 소리가 때로 공허하게 들리는 것도 계급권력의 현저한 비대칭이란 유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원래 의의는 그것이 '시장을 거스르는 정치'를 가능케 한다는 데 있다. 돈의 논리가 수의 논리를 압도해서 정치가 시장을 견제하지 못하고, 시장의 힘이 정치질서를 문란케 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한다. 작금의 민주주의 위기 담론이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이유도 세계화 대세를 업고 날로 비대해지는 금권이 정치과정을 일상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 스티글리츠나 피케티 같은 진보적 경제학자들뿐 아니라 심지어 이코노미스트 같은 보수언론까지 나서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맥락이 여기서 멀지 않다.

그러나 의회선진국들의 경우, 시장 힘이 불비례적으로 정치를 넘볼지언정, 정치는 여전히 시장을 거스르는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령 복지국가란 것도 시장의 '보이는 손'이 낳은 문제들을 '보이는 정치'가 나서서 예방하고 교정해 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정치적 절차 수준에서 공고화된 민주주의가 갖는 위력일 것이다. 요컨대 선진국 민주주의의 위기란 시장권력과의 관계에 닿아있는 바, 복지국가를 넘어 시장을 시장 안에서 먼저 규율하자는 경제민주주의가 손상된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최대의 시대적 관건으로 등장한 내막이 거기에 있다.

권위주의 시절에 세를 키워 온 한국의 시장권력은 소위 민주화 이후에는 점차 노골적으로 정치를 탐해 왔다. 한 재벌의 재력만으로 당이 급조되고 그 총수가 대선에 나서며 순식간에 돌풍을 일으켰던 때가 엊그제다. 재벌 몇이 더 가세했다면 돌풍 아니라 금권정치의 토네이도가 몰아쳤으리라는 상상을 하면 지금도 끔찍하다.

훗날 실제로 재벌회사 회장 출신의 인물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던 우리는 아직 그 여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니 복지수준은 OECD 최하위를 고수하는 데다 경제민주화는 거론조차 부담스럽다 한들, 놀랄 일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가 새삼스럽게 위기에 처했다면 그것은 금권 이전에 이미 정치권 내부의 보다 초보적인 정치적 절차 수준에서의 위기라는 데 있을 터이다. 그에 비하면 선진국적 민주주의 위기 담론들이란 우리에겐 낯간지러운 엄살 내지 호들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정당정치는 정당조직과 정당체제를 근간으로 한다. 엘리트 충원과 정책 형성의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본질적·보편적 갈등인 사회경제적 갈등을 둘러싸고 정당들이 이념과 정책을 차별화하며 배열해야 한다는 상식이다. 그리하여 한국정치가 위기라면 일차로 그것은 이 두 측면에서 모두 후진적이라는 말일 것이다.

우리의 해방이후사가 정당들이 인물과 이권 중심으로 창당·분당·개명을 밥 먹듯 하고 그에 따른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으로 온통 분주했던 누더기 정치사였으니, 이제 와서 이념과 정책 중심의 정당체제를 다그치는 일은 정말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당정치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 곧 당내 민주주의마저 실은 얼마나 엉성한 장식이었던가.

돌아보면, 지역감정과 독재에의 향수가 여전히 무시 못 할 정서일 때, 선거여왕이란 칭호는 전략가에게나 어울릴 수사이며 나라의 진운을 놓고 공부하고 고뇌하며 불철주야 소통해야 하는 최고권력자를 '기리는' 언어로는 애초에 모멸적이어야 마땅했다. 그나마 선거 과정의 온갖 잡음 속에서 창출된 정권 아닌가.

허다한 문제들 앞에서도 꿈쩍도 않던 우리의 대통령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선된 자당의 원내총무를 겨누어 느닷없이, 과연 선거의 여왕답게, 선거에서의 심판 운운하며 날선 몽니를 보이고는, 요동하는 정국에 아무런 반응도 피드백도 없이 다시 홀연히 무대 뒤로 사라졌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야 너무 면구스러워 필설이 따로 필요치 않거니와, 집권당 당내 민주주의의 외양은 일거에 무너지고 의회의 권위란 실은 공염불이었음이 천하에 드러났다.

권력자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중진 국회의원의 코털을 뽑는 일이야 '그때 그 시절' 탓으로 돌릴지라도, 소위 민주화 시대에도 국민의 대표라는 이들이 그 병정놀이에 전전긍긍하며 감읍해야 한다면, 어쩌면 우리에겐 민주주의 위기란 말조차 과분할지 모른다. 하기야 그런 풍토에서 잔뼈를 키워 온 사람들이니 조만간 민주주의의 성근 모래성 쌓기를 다시 시작할 터이고, 냉소와 환멸이 늘수록 그들의 얼차려 정신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기 고

임금피크제는 나눔이다

김 양 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노사는 물론, 정부도 임금피크제가 올 임·단협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필자의 경험으로는 현장 노사의 반응은 별로인 것 같다. 대체로 추세와 분위기를 보아가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반면, 상급노동단체에서는 정부와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강행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사업장별 파업을 조직하고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그간 이해관계자를 두루 만나본 결과를 볼 때, 임금피크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가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임금피크제는 정말 문제적 사안인가? 단도직입적으로 답하면, 임금피크제는 악마도 천사도 아니다. 더구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궁극적 목표도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할 중요한 사안이다.

잘 알다시피 작금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중 하나는 심각한 격차다. 내부와 외부노동시장간, 대기업(원청)과 중소기업(하청)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과 여, 신참과 고참간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곳곳에서 불합리한 차별과 배제가 그늘져 있다. 한마디로 상생과 선순환적 노동시장 생태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런 기형적 노동시장구조하에서는 정부가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책 등 미시적 정책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고용률 70%달성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렇듯 우리의 기형적 노동시장 구조를 조금만 더 뜯어보면, 이른바 호봉제로 익히 알려진 연공서열제 임금과 기형적인 임금구성 등 현저히 낙후된 임금체계가 똬리를 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임금체계란 임금(기본급)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연공급 이외 직능급, 직무급 등 다양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이상 사업장 중 2/3가 호봉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는 과도한 연공급제는 중·고령자는 생산성에 무관히 기업에 높은 인건비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들을 희망퇴직 등 조기퇴직으로 내몰아 이들의 고용불안정을 가중시킨다.

두 번째로 신규채용 감소와 고용 외부화(사내하청, 비정규직 등)를 촉진시킨다. 마지막으로 근속연수별 임금격차는 물론,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확대시킨다.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하였을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7로 대기업정규직 임금의 1/3토막에 불과하다. 결국 이렇게 이중 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는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담보로 현재의 희생을 강요하는 셈이 된다. 이런 곳에서 젊은이들에 무슨 희망이며 꿈을 말할 수 있겠는가?

각설하고 임금체계개편은 어제 오늘 사이에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사가 일찍이 공감하고 수차례 합의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60세 정년법제화하면서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및 정년고용위축 등 일자리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조정(임금피크) 등이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우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장년들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연공급 일변도를 탈피한 다양한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지속적인 신규일자리 창출을 가능토록 하여 청년·중장년 상생고용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일은 누가 주도해야 하는가? 말할 것도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은 당사자인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사안이다. 다만, 정부는 노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임금정보 제공, 컨설팅, 재정지원 등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노사가 성실한 협의를 통하여 당해 사업장 여건에 가장 부합하는 모델을 찾아내는 일이다. 적용대상도 특정직군, 관리사무직, 생산직 등에 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임금체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감액비율도 정년연장이 되는 기간, 연공급 정도, 기업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임금피크로 감소하게 되는 소득을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한다는 노동계 일각의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임금피크제는 고용문제해결의 전부는 아니다. 더더욱 유일한 길도 아니다. 그러나 고령화, 저성장시기에 갈수록 악화되는 작금의 이중 노동시장 구조에서 청장년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차선책이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앞당기는 마중물로서 의의가 자못 크다 할 것이다. 한마디로 임금피크제는 나눔이다.

기 고

광주 U대회의 열정을 기억하자

김 권 필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원장

우려(憂慮)는 기우(杞憂)에 불과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야기다. 당초 많은 사람들, 특히 수도권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광주시민 조차도 '광주 U대회가 잘 될까?'라는 걱정을 앞세웠다. 일부에선 무용론과 반대론, 심지어 반납 주장마저 제기했을 정도였다.

그도 그럴 것이 도시 인프라는 빈약하고, 경제 자립도는 매우 낮다. 지역경제와 산업구조는 허약하고, 중소상공인들은 피땀으로 하루 하루를 버텨나가는 형편이다. 시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청년 대학생들은 취업 전선에서 연일 추풍낙엽이다. 이런 광주에서 세계 대학생들을 불러들여 스포츠 향연을 연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이었다.

그런데다 정부 지원도 소극적인 것만 같았고, 북한 선수단 참가마저 막판에 무산됐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메르스까지 창궐하면서 '웃음거리가 되진 않을까.' 애먼 시민들까지 속을 태워야 했다. 하지만 한낱 기우(杞憂)였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역량을 과소평가한데서 나온 쓸데없는 걱정들이었다.

광주는 위대했다. 이 모든 불리한 조건을 이겨낼 만큼 광주의 저력은 탄탄했고, 시민들의 참여의식은 남달랐다. 난제들이 겹칠수록 시민들은 하나가 됐다. 물질적인 부족함은 정서적인 풍족함으로 메우고도 넘쳤다.

시민들이 앞장섰다. 인근 경기장을 찾는 발길이 잦았다. 딱히 좋아하는 종목이어서가 아니었다. 우리 지역을 찾은 세계의 청년 대학생을 맞으러 간 것이다. 응원도 정겨웠다. 편을 가르지 않았다. 승패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몸짓 하나하나에 박수와 함성을 보냈다. 실수와 자책에는 더 큰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교통통제에도 흔쾌히 동참했다. 불편했지만 그 이상도 감수할 태세였다. 그러면서도 축제를 즐겼다. 곳곳에서 펼쳐진 컬쳐버시아드를 맘껏 누렸다.

자원봉사자들도 크게 한 몫 했다. 10대 청소년부터 80대 노인까지, 유학생에서부터 전직 파독 간호사에 이르기까지. 외국 선수와 임원 곁에서, 경기장 한 켠에서, 그리고 길거리 자원봉사 부스에서 묵묵히 활동했다. 통역을 맡았고, 선수단 이동과 경기 진행을 도왔으며, 광주·전남 구석구석 관광을 안내했다. 9300여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실천하는 시민'의 표상을 보여줬다. 대학생을 포함한 5만여명의 서포터즈들도 힘을 보탰다.

공무원들은 축제의 연출가였다. 그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었다. 치밀한 기획에서부터 섬세한 현장 시나리오까지 빈틈없이 준비했고, 완벽하게 실행했다. 광주시 본청에서부터 말단 사업소와 출자·출연기관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전남·북도는 물론 교육공무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발 벗고 나섰다. 특히 경찰, 소방, 군인들의 숨은 노고는 '안전 노이로제'에 걸린 우리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

대회의 꽃은 역시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었다. 구태여 젊은이들의 축제를 금메달 숫자나 메달 색깔로 덧칠하고 싶지는 않다. 많은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광주시청 소속 김국영선수도 메달을 따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100m달리기에서 한국신기록을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 메달이 아니라 기록에 도전하고, 자신과 승부하는 젊은이의 모습이 우리를 더욱 기쁘게 했고, 행복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가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사상 최초로 제패한 곳이 바로 '광주'라는 사실 또한 감출 수 없는 기쁨이다.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궈낸 쾌거와 함께 '광주'가 세계 스포츠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우리는 이번 대회를 흥겹게 즐기고, 알차게 치렀다. 동시에 우리의 저력과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지역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자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녘의 소시민이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을 향해 나아가는 열린 시민, 깨어있는 시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도 갖췄음을 체감했다.

이제는 흥분과 감격을 뒤로하고, 다시금 차분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다. 축제가 끝났으니, 그동안 제쳐놓았던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현안에 대한 충돌과 갈등이 다시금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나 U대회 성공을 위해 불편을 감수했던 성숙한 시민의식, 편을 가르지 않고 함께했던 대동정신, 패자를 격려하고 승자를 축하했던 열린 마음만큼은 계속 품고 갔으면 좋겠다. 광주가 재도약하는데 필요한 가장 탄탄한 구름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社 說

안전요원도 없이 해수욕장 개장한다니

올 여름 해수욕장을 찾기 위해서는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할 것 같다. 전남도내 12개 시·군 55곳의 해수욕장 중 34곳의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전장비도 없이 개장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해수욕장은 자격증 없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해경이 해체된 가운데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바뀌게 되면서 관리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해경의 공백을 메울 전문 구조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한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지난해까지 해수욕장 안전을 관리했던 해경은 올 여름부터 해상에서 구조활동에만 전담하고, 지자체가 모든 안전관리 책임을 맡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에 당초 약속한 '해수욕장 안전 관리 예산'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재난관리기금·예비비 등을 활용하며 안전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워낙 가용 예산이 없어 인원·장비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해수욕장은 수상·재난인명구조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단기 아르바이트'생들로 안전요원을 대체하고 있다.

물론 이마저도 구하지 못한 일부 해수욕장은 개장을 한없이 미루고 있고 수천만 원짜리 모터스키나 구명보트 등 구조장비 구입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 지역 개장 해수욕장 62%(34개소)가 관련법을 지키지 못한 채 피서객들을 맞고 있다. 이러다 보니 피서객들은 목숨을 내놓고 해수욕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고 무더위도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하루빨리 '해수욕장 안전 관리 예산' 집행 약속을 이행해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름휴가 고민 말고 국내 관광지 살펴보자

올해 1분기에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32억1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딘 경기회복 탓에 국내 카드 사용 액수가 제자리걸음을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해외에서의 카드 이용 금액이 증가한 것은 출국자가 지난해 1분기 393만 명에서 올해 470만 명으로 19.4%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만큼 국내 관광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즐겼다는 얘기다.

반면 그동안 한국을 찾던 관광객은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관광의 '큰손'으로 불렸던 중국인 관광객은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메르스(MERS)사태 여파에 일본의 엔저 현상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한국 관광산업이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는 셈이다.

관광산업의 침체는 내수 부진으로까지 이어져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현실 속에 국내 여행업계에서는 올 여름 휴가만큼은 국민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 관광지를 선택해 주길 바라고 있다. 그것은 여행업계의 바람만은 아닐 것이다.

최근 광주일보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올 휴가는 대한민국으로!' 캠페인을 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애국심에만 기대어 해외여행 자제를 호소하기는 어렵지만 외환위기 시절 온 국민이 동참했던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은 하나 되는 움직임이 필요한 때다.

마침 행정자치부는 메르스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지방공기업과 함께 이달 24일까지 '여름휴가 국내여행 가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내수 살리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전 직원이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한 기업도 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었다. 어디로 갈까 고민하지 말고 국내로 눈을 돌리자.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휴가철 관광객을 내 고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할 때다.

無 等 鼓

명왕성 하트

미지(未知)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은 15~18세기 '대항해 시대'나 우주시대인 현재나 마찬가지일 터이다. 대형 범선을 타고 떠난 선원들이 수년만에 신세계 문물을 들고 온 것처럼, 요즘은 무인 탐사선이 태양계 행성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보내오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New Horizons)호가 최근 태양계 외곽에 위치한 명왕성을 지나며 인류 우주탐사 역사의 새 지평을 열었다. 탐사선은 9년6개월 동안 56억7000만㎞의 우주공간을 항해한 끝에 명왕성에 이르렀다. 탐사선 속도는 무려 시속 4만9600㎞. 이를 환산하면 초속 13.8㎞이고, 마하 40.5에 달한다.

탐사선은 그 먼 거리에서도 명왕성 관측 결과와 사진을 잇따라 보내오고 있다. 특히 전송 사진 중에는 일부러 탐사선을 환영이라도 하는 듯 지표면에 하얀색 하트 모양이 선명히 찍힌 것도 있어 화제다. NASA는 너비 1590㎞의 이곳을 명왕성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톰보 영역'(Tombeaugh Regio)이라고 명명했다.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가 얼어붙은 지형으로 분석했다.

우리는 탐사선 덕분에 밤하늘에서 맨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명왕성의 생생한 민낯을 안방에서 볼 수 있었다. 특히 태양계 9번째 '행성'에서 '왜소행성'으로 지위가 떨어진 명왕성에 3500m 높이의 산과 대기층이 있고, 주위에 플라즈마 꼬리가 형성돼 있는 걸 보면 신기하기만 하다. 앞으로 탐사선은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카이퍼 벨트'로 향하는데 20여년간 탐사 활동을 계속하며 지구로 관측 정보를 보내 올 것이라고 한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영국 과학자 아이작 뉴턴(1643~1727)은 죽기 직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 "…나는 해변에서 노는 소년처럼 생각된다. 나는 때때로 매끄러운 자갈돌이나 예쁜 조개껍질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진리의 대양은 모조리 미발견인 채 내 앞에 누워 있다."

광대한 우주를 바다로 비유하자면 인간의 우주탐사는 이제 바다에 발목을 담근 정도일 것이다. 아무도 가본 적 없는 미지 세계에서 탐사선이 어떤 소식을 전해 올지 궁금하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